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75
----------	------

발의연월일 : 2024. 8. 9.

발 의 자 : 황정아 · 황명선 · 이건태  
박민규 · 김 윤 · 박지혜  
김남근 · 박정현 · 정을호  
모경종 · 강준현 · 조인철  
이훈기 · 박해철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2022년 483만 9천여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 8천여건으로 30만 9천여건 급증하고,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 · 보좌진 · 언론인 · 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을 “법원”으로, “장이”를 “장은”으로, “다음”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으로,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을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른”을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로, “제공 요청은”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여야”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면으로 요청할”을 “법원의 허가를 받을”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후”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를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를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9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에”를 “제9항에”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으나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⑧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4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를”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두”를 “한”으로, “매 1회 3개월의”를 “3개월의”로 한다.

제104조제5항제13호 중 “제83조제5항”을 “제8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83조제7항”을 “제83조제11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생략) ③ <u>전기통신사업자는</u>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u>장이</u>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u>다음</u>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u>요청하면 그 요청에</u> 따를 수 있다. 1. ~ 6. (생략) ④ <u>제3항에 따른</u> 통신이용자정보 <u>제공 요청은</u>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원</u> ----- ----- ----- ----- --- <u>장은</u> ----- ----- ----- ----- ----- ----- --- <u>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u> ----- ----- ----- ----- <u>요청할</u> ----- -----. 1. ~ 6. (현행과 같음) ④ <u>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u> ----- <u>제공을</u>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  
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  
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요청하는 경우에는-----  
-----  
-----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 -----법원의 허가를 받을-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  
한 후-----그 허가를 받  
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  
여야-----.

⑤ 제4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  
보 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  
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  
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  
받았으나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폐  
기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



<신 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보 제공을 받은 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⑧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4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  
-----  
-----  
-----  
-----  
-----.

⑩ -----  
-----  
-----  
-----  
-----  
-----  
-----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생략)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생략)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9항에-----  
-----  
-----.

⑪ -----  
-----  
-----  
-----제9항에-----  
-----  
-----  
-----.  
-----.

⑫ (현행 제8항과 같음)

<삭 제>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지-----.

<p>1. ~ 5. (생 략)</p>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생 략)</p> <p>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u>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u> 범위에서 정한 기간</p> <p>④ ~ ⑧ (생 략)</p> <p>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 략)</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p> <p>1. ~ 12. (생 략)</p> <p>13. <u>제83조제5항</u>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p> <p>14. <u>제83조제7항</u>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한</u>----- -----<u>3개월의</u>----- -----</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제83조제9항</u>----- ----- ----- -----</p> <p>14. <u>제83조제11항</u>----- -----</p>
--	---

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	-----
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
아니한 자	-----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